

이 가파른 길을 깡깡대며 올라가야 공연 볼 수 있다니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연장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이 최근 300억원을 들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이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전당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고 주차장내 경사가 가팔라 엘리베이터까지 가지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휠체어장애인 배영준씨가 지난 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예술의전당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장애인엔 '장벽의 전당'

300억 리모델링에도 외부 접근로 없어 지하주차장으로만 출입 가능 차량 진출로 사고 위험...엘리베이터 가는 길 경사가 가팔라 오르지 못해 화장실 입구 좁아 전동휠체어 못들어가...전당측 "장애인 편의 개선할 것"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6일 휠체어장애인들과 함께 찾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전당은 리모델링을 거쳤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개선이 이뤄진 곳이 없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다. 사실상 유일한 출입구다.

새빛홀(장애인택시)이나 본인이 운전해 전당 대극장 뒷편까지 올라 갈 수는 있지만, 이 길은 입구에 철제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전당 측은 외부 인사가 방문하거나 공사 차량 출입시에만 이를 열고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전당으로 올라 가야 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들의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휠체어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들이 차량이 이동하는 지하주차장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당장 이날도 5분 동

안 7대의 차량이 이동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장애인이 입구에 진입해 20여m 이동하자 지하에서 차량이 올라왔다. 코너의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이나 위치 알림 사이렌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차량 진입로를 통과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통로도 문제였다. 내려갈 수는 있었지만 경사가 심해 다시 올라오기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4분의 1 가량 올라왔을 때 휠체어는 오르지 못하고 점차 뒤로 밀려났다.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장애인은 홀로 경사로를 오르지 못했다.

동행한 휠체어 장애인 배영준(25)씨는 "운동선수이자 성인 남성인 나조차도 오를 수 없는 경사로를 어떻게 일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장애인 경사도 기울기는 18분의 1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 있는 남자화장실 입구가 비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로 설치해야 하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8.33도)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배씨는 "전당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권고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랐지만 장애인에게는 어려움이 계속됐다.

소극장 입구에는 점자블럭 위로 매트가 깔려있어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었고 자동문

이 열리는 곳이 아닌 영동한 장소에 점자블럭이 설치돼 문에 부딪힐 위험도 있었다.

대극장은 지상 2층까지 있지만 내부에는 계단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은 올라 갈 수 없었다.

소극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다. 그나마 대극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지만 입구가 좁아 전동휠체어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내부 역시 휠체어를 돌릴 수 없을만큼 좁았다.

또 안내데스크 높이도 너무 높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했다. 맞은편에 설치된 키오스크 터치 화면도 너무 높아 휠체어 장애인 손이 닿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 했다.

배씨는 "3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이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린 광주예술의전당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은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맡아 기존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고 대·소극장의 무대 객석과 장비, 기계 등을 위주로 개선한 것"이라며 "35년 전 예술의전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 장애인 법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개·보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서훈 취소 죄송합니다" 박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양금덕 할머니 찾아 사과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를 찾아 서훈 취소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양 할머니의 집을 찾아 "(서훈과 관련)인권위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시작한 만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결과를 내놓지 못해 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상사가 생긴 만큼 인권위가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양 할머니를 위로했다.

양 할머니는 "괜찮다"며 "멀리서 찾아와 주니 고마울 따름이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양 할머니를 국민훈장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을 제기해 무산됐다. 한편, 시민모임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시)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제3차 번째 법률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 4억2000만원을 신청했다"며 "일제 전범 기업에 면책을 주는 공작 관련 지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전역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봉이 김선달' 이석호씨 친척 상대 정부, 국유지 불법취득 반환 승소

정부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93)씨의 친척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7000억원대 광주·전남 국유지(3만5266필지·1억7318만㎡)를 불법취득한 장본인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씨가 불법취득한 국유지의 규모가 전남 지역 6개 사군에 걸쳐 그 양이 매우 방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씨 등에게 토지를 사들인 제3자에게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1997년 특례 매각 및 환수보상 지침을 만들었다. 이씨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사들인 소유자가 이씨의 불법취득 과정을 몰랐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국유지를 가진 반환하면 환수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게 골자다.

이씨의 인척인 A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의 국유지 토지를 각각 반환하고 환수보상금지급을 신청, 총 7억7000여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수령한 환수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토지를 이씨가 불법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A씨는 환수보상대상신청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음주운전 은폐 의혹 수사 의뢰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특정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감했다는 의혹(9월 25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 광주시 광산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서 공문 무단삭

제 등 음주운전 은폐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청장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공단 본부장과 팀장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 위조, 재물손괴 등의 혐의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단간부인 본부장과 팀장이 6개월에 한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에서 A씨를 고의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지난 12월에는 A씨의 주민번호를 잘못 조회해 A씨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밝혀졌지만 본부장과 팀장이 공모해 경찰의 회신 공문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광산구는 공단 청렴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했지

만 관련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어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공단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0-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